

광주시 발주 공사...관리·감독체계 정상 작동했나

올해 6월 공사 중단 후 9월 재개
공정 만회 압박 속 안전관리 도마
설계 누락·안전성 검증 미흡 의혹
현행 감리·점검 체계 실효성 논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사망하면서 감리와 발주청인 광주시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16억원(국비 157억원, 시비 359억원)을 투입해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하는 대형 공공시설이다.

2017-2019년 기본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거친 뒤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9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기존 건물 철거와 터파기, 지하층 골조 공사 등을 거쳐 지상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층 슬래브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해당 공사는 지난 6월 공정을 60% 상태에서 한 차례 일시 중단됐다가 3개월 만인 9월 재개된 상태였다.

공사 초기 공동도급 체제로 진행됐으나 원도급사(흥진건설) 모기업(영무토건)의 부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원할 추진 TF'가 가동됐고 9월 단독 시공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매몰자 수습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지난 13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량이 마지막 매몰자를 수습한 뒤 이동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문제는 이 같은 장기간의 공정 관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공사 중단과 재개에 따른 일정 압박 속에서 구조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공정 변경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진행됐는지가 후속 조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공기 우선, 안전 후퇴' 관행이 이번 사고에서도 되풀이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는 시공사의 직접적 책임이지만,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이를 감독하는 감리와 공정을 관리하는 발주청 역시 공사 전반

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 현장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과 미도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는 설계·시공·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발주청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직전 현장에서는 슬래브 콘크리트 물량이 설계 내역에 일부 누락돼 있었고 감리 확인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 추가 반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초기 설계·내역 검토에서 누락이 걸리지 않은 배경과 추가된 콘크리트로 인한 하중 증가 상황에서 구조 계산과 설계 변경, 감리 승인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향후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은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해외 설계사가 참여한 상징성 있는 공공 프로젝트다. 공사 규모가 크고 난이도와 구조적 복잡성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별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감리·시공에 대한 발주청의 통합 관리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는 지적

이 적지 않다.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나 공정 중단 조치가 있었는지, 정기·수시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점검 결과가 실제 공정 관리에 반영됐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광주의 경우 학동 철거 건물 붕괴(2021년),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2022년) 등 대형 붕괴 참사를 겪으며 공공·민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행 감리·점검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보고 설계 변경 과정과 감리 보고서, 콘크리트 타설 승인 절차의 적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책임 소재 규명과 제도 개선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감리 일지나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감리보고서 등은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결정 권한도 없다"며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철저히 협조하고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운영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안전도시 정책 산업현장 실행 의구심”

시의회 “안전관리체계 전면 혁신 필요”

민주시당 “공공시설 사회적 책임 무거워”

정의 시당 “예견된 인재...특별법 제정을”

시민단체 “市, 안전불감 행정 시정해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광주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책을 전면 혁신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안전 도시를 표방해 온 광주시의 안전철학과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돼 실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광주시는 공사의 설계·발주·시공·감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민간 안전전문가와 협력해 행정사무조사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공공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 참사로 어떠한 경우에

도 반복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엄중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노동자의 안전은 사회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며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학동 철거 건물 붕괴와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등 대형 참사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 “이번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며 “발주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

다”고 신속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충분한 양생기간 확보, 적정 공기 산정, 안전관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 광주시당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2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 “화정 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며 “광주시는 안전 불감 행정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공공기관인 광주시의 발주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며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고 정부와 정치권은 발주자를 산업안전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제도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의 투명한 원인 규명과 안전 시스템 재정비를 위해 ‘붕괴참사 안전대책위원회 거버넌스’를 구성하자”고 광주시에 제안했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는 “안전 전문가, 유가족 대표, 노동조합, 사회단체 등 광주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서형우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을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은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용: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과 주행과 동일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p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CMYK